전북-서울시 공공급식 상생 추진

공공급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내년 3월 1개 지역 시범운영·2019년까지 25개 구청 전면 실시

전북도와 서울시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을 위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서울시가 공공조달을 통한 산지-자치구 간 매칭으로 산지 직거래 방식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는 도내 시·군 생산지 관리와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공공급식 기준에 부합하는 시·군을 추천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각 시·도에서 추천된 시·군과 서울시 자치구 간 MOU 체결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시·군과 자치구가 상호 협의해 직거래장터개설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3월 1개 지역을 선정(시·군 공공급식센터+구청) 시범운영하고 오는 2019년까지 25개 구청을 전면 실시할 계획을 내놨다.

협약식에 참석한 송하진 지사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우리도와 서울시가 상호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전북도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농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도의회, 예산 5억 삭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삭감'이 결국 현실이 됐다. 그나마 전액 삭감이 아닌 절반 삭감으로 돼 당분간 센터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비공개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진행,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당초 전북도는 인건비와 운영비·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심의를 벌여 10억원에서 절반인 5억원을 삭감시켰다.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뉴시스

지역경제발전 위해 지난달 30일 전주지역 9개 중소기업협의회 회원 50여명이 최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5면〉

도, 수산물 가공산업 지속 육성

전북도가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품질 향상 등을 꾀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140개소의 수산물가공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량은 8432t에 이른다.

먼저 도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개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가공시설이 운영되면 새로운 수산가공품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저온저장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수산식품거점단지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개발한 수산물공동브랜드인 '해가람' 상표를 적극 홍보해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뉴시스

"규제프리존은 국민의 삶 재벌에 바치는 꼴"

민주노총 전북본부, "송하진 지사의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해야"

도내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이 결국 안전과 환경, 고용, 노동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영리 병원이 허용되고 GMO 농산물 규제가 완화되며 고용도 악화되고 노동자 보호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규제프리존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측 연구위원이 노동 규제를 풀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결국 규제프리존이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프리존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특례조치가 반영돼 기업들에게는 큰 이익이라고 전북본부는 내다본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송하진 지사의 규제프리존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의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송하진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입법안이자 새누리당 20대 국회 1호 제출법안"이라며 "그런데 송 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조속 통과를 요청하며 정부의 규제완화에 행보를 같이해오고 있었다"면서 송 지사의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공모로 추진됐다는 정황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재벌들이 미르 재단에 출연을 확정한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특별 주문한데 이어 K스포츠재단 출연이 확정된 5일 후에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에 동참해 확답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으로 개발제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최순실 일가가 막대한 땅을 매입해놓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분개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지난 8월 규제프리존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낸 바 있다.

규제프리존이 전북의 중점 사업인 농생명과 탄소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건의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고민형 기자

완주군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6일 개최

완주군은 커뮤니티비지니스 정책 도입 1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외 사회적경제 동향과 완주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을 오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호소우치노부다카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이하 'CB') 종합연구소장, 스테판 판호이젠 네델란드 사회적기업 협의체 정책실장, 윤석인 (전)희망제작소 소장,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등 국내외 사회적경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CB 제창자인 호소우치 노부다카((細?信孝)씨의 청년 실업률 상승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난제 해결! 가까운 곳의 저력 CB' 특강이 있다.

아울러 ▲스테판 판호이젠 실장의 '유럽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례' ▲전대욱 센터장의 '리질리언스와 공동체 네트워크' ▲윤석인 소장의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오늘과 협업의 미래'간 주제로 정책제언과 토론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군에는 협동조합 70개, 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11개, 공동체회사 50개소 등에서 1,300여명의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공동체활력과를 신설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북도, AI 차단방역 특교세 7억 확보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AI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설치 ▲철새도래지 및 가금류 밀집단지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도는 현재 AI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25개소)과 이동통제초소(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군산 금강하구둑·김제 만경강·고창 동림저수지)와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AI가 발생한 시도의 방문을 금지하고 AI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군산시, AI 차단 선제적 방역활동 나서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에 나섰다.

군산시 가금류 사육농가는 22농가로 약 80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더욱이 금강하구 등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큰 지역으로 사전 차단방역 활동이 중요하다.

이에 군산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금강하구 및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전담반을 편성해 주 2회 이상, 소규모 사육농가는 주 1회 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 소독과 예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금류 판매장에 대한 소독약품 공급 및 이력관리를 통한 사전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관내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위해 가금류 사육이 집중된 서수면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금류 사육 전 농가에 대해 담당 공무원 지정제를 실시, 매일 전화예찰 실시, 방역추진 활동 점검 및 방역상황 공유를 통해 차단방역에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관내 주요 진출입 지역에 추가적인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원 군산시 농정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사전 차단방역이 중요한 만큼 가축사육 농가들의 소독, 농장 출입 통제 철저 등 농가 자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 기자